

정부자금 집행요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

APC 사업수행자를 위한

보조금 및 용자금 집행시 준수사항

- ◆ 본 자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 본 자료에 수록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담당 이강권주무관)에서 작성하였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및 복사, 인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본 원 칙〉

- ◆ **투명성** : 절차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 ◆ **효율성** : 예산절감 및 효과 극대화
- ◆ **도덕성** : 사적이용 금지, 사회 윤리규정 준수 등(ex : 유흥주점 금지 등)

□ 사업추진 방침문서 결재(원인행위)

-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내부방침 수립
 - 사업목적, 추진배경, 일시·장소, 참석자 등 일반개요,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계획, 소요예산(안) 등

□ 결과보고서 결재

- 사업추진 결과를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결과보고 결재
 - 사업목적, 일시·장소, 참석자 등 일반개요,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 효과, 향후계획, 비용정산내역 등
- * 기타 부대서류 : 회의록, 사진, 구매물품사진, 검인수, 참석자 명부 등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 보조사업별 예산 및 추진일정 관리로 자금집행의 계획성 제고
- 계획적 자금집행 및 미집행 예산관리 용이

□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보관

- 각종 행사 및 교육, 견학, 물품구입, 작업 전·중·후, 인부사역 등 **최대한** 사진촬영 후 보관, **정산시 제출**
- 홍보, 마케팅 등 자금집행 후 내역을 사후에 확인하기 곤란한 것은 반드시 당시의 사진 촬영 후 보관, **정산시 제출**

□ 회계연도 준수

-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지출도 연말에 종료(민간보조사업)
 - *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년도), 국가회계법 제5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단,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 가능
 -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기한) ①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원인행위는 연말에 종료, 지출은 2월말까지 종료
 -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로 폐쇄

□ 사업비 가내시 및 확정

- 다음연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예산안 통지(사업비 가내시)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자]
- 지자체 및 사업자별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준비를 위함
- 국회(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되면 즉시 보조사업자에게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통지(사업비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안내 병행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통보,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확정통보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보조금 교부신청)[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관련 요건(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서 보조금교부결정 통보를 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통보)
-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공식 약속 문서임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일부터 공식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부담 및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 지급요청 실시(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집행 후 사업비 정산 보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진행절차 : ①사업비 가내시 → ②사업비 확정통보 → ③보조금 교부신청 → ④보조금교부결정 통보 → ⑤사업추진 → ⑥보조금 지급요청 → ⑦보조금 집행 → ⑧사업비 정산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및 자금집행 기준일 준수

- 모든 계약 및 자금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문서시행일) 이후에 시행하여야 함
-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임의적인 사업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가 전적인 책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에 실시 및 집행한 부분은 자금집행 곤란(보조사업비 인정 불가, 정산시 필수 확인 사항)
 - 임대계약일, 자재구입일, 인부사역일 등 모든 서류의 날짜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이후여야 함
 - * 일부 지역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한 사례 다수 발생,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는 보조금 횡령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2조(지출의 절차)
- '12년도부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비와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가능
 - 시·도와 시·군에서 총 사업비 확정과 보조금(국고 등) 교부결정통보를 즉시 시행하여 국고와 자부담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교부(국고 등) 및 지방비 확보는 단계적으로 추진
 - * '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 17. 자치단체보조사업, (3)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한다.
 - 다만, '13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은 준수하여 집행(APC사업 기준)

○ 주요 항목별로 15% 이내는 자체조정 가능, 30%까지는 시군 승인, 50%까지는 시도 승인

-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 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인 요청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보조금의 집행)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당초 평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주품목 등)은 임의 변경 금지
- * 세부사업계획 조정, 설계 일부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은 반드시 시군과 사전에 협의 및 승인 후 시행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금 등 자금의 성격별로 별도 통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전에 해지하여 반납

- * 국고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반납이 원칙, 사적 사용 금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 민간경상보조(307-02).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처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함

□ 자부담 능력 확인 및 우선 집행

○ 사업비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① 자부담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 제출 또는
- ② 농협조직 : 여러 법령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등의 사업승인 결의서가 있으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 ※ 시설투자의 경우 농협법에 의거 고정자산 투자 기준 충족
- ② 법인조직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과 결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자기자본이 아님)이 자부담 이하인 경우 지원 곤란

< 용어정의 >

-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법 451조)
 - 발행액면주식의 액면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액(불입잉여금)을 제외한 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불입액, 주식배당의 자본대체액으로 구성
- 자기자본 : 총 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기초자본 + 부가자본)
 - 기초자본 :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출자금
 - 부가자본 :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잉여금(자본·채평가·이익) 및 단기 이익금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성 출자금과 재산권에 제약이 없는 현물성 출자금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사용이 되어서 없는 현금성 출자금과 재산권 제약이 있어서 담보제공 등이 안 되는 현물성 출자금 등은 자부담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때(시설건립 등을 포함한 투자) 외부차입이 아닌 안정적 재무구조(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자본금)를 요구하는 것은 보조시설 등이 건설하게 당초 지원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금도 초기 설립 자본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토록 요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시에는 우선 자부담을 집행 후 보조 및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자부담을 무조건 전액 우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집행(자부담이 20% 이상이면 2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자부담이 2억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자부담의 50%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함께 집행**

<①잔액증명서로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한 경우>

- 자부담은 우선 50%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자부담 50%가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전에 잔여 자부담 확보를 확인 후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②잔액증명서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

-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자부담 50%가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전에 잔여 자부담 확보를 확인 후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② 사업 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상당수의 지자체 등에서 **자부담 및 보조금 통장을 지도 및 관리하고 있음**(인감 병행사용 등)

□ 사업비 지출은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증빙

○ 세금계산서 구비(간이영수증 인정 곤란)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말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투명한 거래 실시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가급적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이 일치하여야 함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지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 매월 또는 매분기 중간정산

- 사업비는 기성고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가 희망할 경우** 선금금(계약금 포함 총 계약대금의 80%까지 가능)을 지급할 수 있음.

-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60% 집행 필요
- 단, 선금금은 이행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보조금의 집행)②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금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의 대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금과 개산금)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금(先金給)이나 개산금(概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금이나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금)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 및 중간 정산 실시

- 사업비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즉시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고, 해당 시·군은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정산실시

- 정산결과는 다음해 3월까지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로 보고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규정 제13조(보조금의 집행)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기본원칙** :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

☞ **사업비**란 보조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말하는 것

☞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안됨**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반드시 확인**

- 조세제한특례법 적용은 **순수 농민(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해당**(농협은 사료 및 농기계임대은행만 해당)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 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것만 해당(조합원 물건을 수탁하거나 매취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세율 및 환급대상은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내역 철저 확인

- 영세율 : 농업용 세척기, 선과기, 농업용 스프링클러(관수시설) 등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세금계산서의 세액 부분이 "0"임)

* 영세율적용 품목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면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 환급대상 : 농업용 필름, 지주, 부직포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농민(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되돌려 줌(세금계산서의 세액 부분에 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 세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안 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⑦**사업주 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액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감사원 안내자료('13.4.8) >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자인 보조사업자가 부가세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적용
-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적용되지 않음
- ※ 환급 대상 농어기자재와 달리 APC, RPC 등 농어업 보조사업별로 부가세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요건이 될 경우 환급 사유가 발생
- 등록사업자는 분기별(법인사업자) 또는 반기별(개인사업자)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부가세액을 환급받고 있음
-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해당 기수의 매입액(공사비, 원재료 구입 등 금액)이 매출액을 상당히 초과(기존 등록사업자인 경우)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액(공사비)만 발생(신규 사업자인 경우)하므로 환급금이 있을 경우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환급금으로 볼 수 있음(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일 경우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환급금으로 볼 수 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한 시기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부가세환급금이 없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 환급금도 없음
-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매입액에 대한 환급금과 섞여 있을 경우 매입액 중 보조사업 비중만큼 환급금을 같은 비율로 환수(자세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담당 세무사와 상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예시

< 사업비 정산(예시) >

- 당초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가 1,100만원
* 사업비 승인 내용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필요
- 실제 집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정산대상 사업비가 됨
* 실제 집행한 금액은 승인받은 사업비 이내이어야 하고, 추가 자부담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관계기관(농업금융정책과, 감사원) 공식 답변임('14.4.8)
- 부가가치세 환급분(1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정산대상 사업비가 되는 것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 지원된 사업자금은 재 계산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
- ※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승인받은 사업비	1,100만원
집행금액	1,1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1,100만원-100만원)
지급 보조금	500만원 (1,000만원×50%)
지급 융자금	300만원 (1,000만원×30%)

<예시 2>

승인받은 사업비	1,100만원
집행금액	1,0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91만원
사업비	909만원 (1,000만원-91만원)
지급 보조금	454.5만원 (909만원×50%)
지급 융자금	272.7만원 (909만원×30%)

<예시 3>

<정산 오류>

승인받은 사업비	1,100만원
집행금액	1,2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09만원
사업비	1,091만원 (1,200만원-109만원)
지급 보조금	545.5만원 (1,091만원×50%)
지급 융자금	327.3만원 (1,091만원×30%)

<예시 4>

<정산 오류>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집행금액	1,100만원
환급 부가가치세	1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1,100만원-100만원)
지급 보조금	500만원 (1,000만원×50%)
지급 융자금	300만원 (1,000만원×30%)

* 본 예시에서의 환급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

* 예시 3, 4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나 보조금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용)		책번호	1권	1호			
일련번호		1	2	3	4	5	6
등록번호	1 2 3 - 4 5 - 6 7 8 9 0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통영철강	상호 (법인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사업장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동 1번지	사업장 주소	경남 통영시 문화동 1번지				
업태	도.소매	업태	종목	종목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년월일	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년월일	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2007	3 1 4		2 0 0 0 0 0 0	1 0 0 0 0 0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3 1	농업용스크린쿨러 일체	set	1	1,000,000	1,000,000	0	
3 1	농업용벌판(과수재배용)	개	10	100,000	1,000,000	1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함	
2,100,000							

22226-28131월 '96.3.27승인

인쇄용지(특급)34g/m2 182mmx128mm

*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용 스크린쿨러” 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거래일자		거래명세표 (공급받는 자용)					
2005년 1월 1일							
상호 (법인명)	성명	등록번호	1 2 3 - 4 5 - 6 7 8 9 0				
사업장 주소	경남 통영시 문화동 1번지	상호 (법인명)	통영철강				
전화번호	055-123-4321	사업장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동 1번지				
합계금액	₩1,000,000	전화	055-123-1234 팩스 055-123-1235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1	농업용스크린쿨러 일체	set	1				
	연질호스	롤	20	10,000	200,000		
	볼벌브	개	20	10,000	200,000		
	점적노즐	개	10	10,000	100,000		
	새틀	개	10	10,000	100,000		
	연결구	개	10	10,000	100,000		
	모터	개	2	100,000	200,000		
	자동관비시스템	개	10	10,000	100,000		
	미	하		여	백		
합계					1,000,000		
공급가액	1,000,000	세액	합계금액	1,000,000	미수금	0	인수자 성명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부가가치세 환급)**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7.16. 신설>

□ 지방비 부담 비율 및 조정 범위

○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부담비율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농식품부&기획재정부 협의 후 국회 심의사항)**

- * 정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부분임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단, 사정의 변경에 의한 **경비의 배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비 부담비율은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하향조정은 곤란**

- **지방비를 축소해서 총사업비가 줄거나, 사업자가 지방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곤란(승인사항)**

- 지방비는 국가 입장에서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자부담이므로 반드시 부담해야 함(민간사업자는 법률상 간접보조사업자임)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편성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승인사항)**
단, 자부담을 다른 국·도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회수대상)

- **자부담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 일반유형은 보조사업자 명의 등기 원칙이고 공공유형은 정책적으로 지원제외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용도의 사용 금지

○ 부당사용시 자금회수 및 1 ~ 5년간 모든 정부지원사업 배제

- 대출금(보조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의 금지) <개정 2009.1.30>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제63조(지원의 제한)

□ 재산처분의 제한 등 사후관리 기준

○ 보조사업으로 취득 및 효용이 증가한 재산은 임의처분 금지

-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재산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1차로 지원제한 실시(제한기간은 미정 또는 원상회복시까지)
 - 2차로 일정기간을 두고 원상회복토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에도 원상회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지원된 시설물은 반드시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이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감사 및 수사기관 등의 통보 및 안내 등이 있을시 즉시 지원제한 실시**
 - 단,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지원제한기간 확정 등은 형 확정 후(재판종료 등) 실시
 - 보조금 회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해당 법인 및 대표 등의 재산 가압류 실시
 - *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통지로 보조사업자의 의견조회 및 이의제기 시행

□ 부지선정시 주의사항

- **예정부지가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건립 곤란**
 - 건립부지에 담보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향후 건립될 보조시설에 재산권 제한이 발생(자동 담보제공 등)되고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 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립부지는 보조사업자 명의로 확보(구입 또는 현물출자)하는 것이 원칙. 단, 최소 10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가능**

- * 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용도지역 및 건폐율, 용적율 확인

- 대부분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100%임
- 단, APC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를 확인(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 **생산녹지지역은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만 해당되어 APC는 적용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국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국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용도지역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보전·생산·자연)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 담당)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계약대행은 폐지**)

< 계약대행에 따른 문제점 >

- 보조금 부담사용 방지 및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계약대행 실시**(12.4.24 ~ 8.19)
- 계약대행 업무를 사업부서가 아닌 회계 및 경리부서에 담당
 - 이로 인해 업무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 소요
- 지자체 발주공사와 동일하게 추진하여 공사비 과다 소요
 - 대부분의 공사가 50억 미만이어서 **최저가 입찰대상 미 해당**
 - * 300억 이상 공사만 최저가 입찰 가능(국가계약법 제42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제42조1항)
 -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미적용**하여 적격업체 선정 곤란
 -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지방계약법 제43조)
 -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저 낙찰하한율” 제도에 따라 공사비 과다소요**
 - * 10억 이상 공사 및 2억 이상 물품구입, 기술용역(설계)은 예정가격의 **86.745%의 낙찰율**을 적용하고 그 미만은 **87.745%의 낙찰율** 적용(행안부 예규 405호)

- 사업부서에서 직접 공고 및 평가단 운영 등 선정업무 대행 실시
 - 시·군은 공고 및 발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도·감독하는 입찰대행의 주체임
 - 시군 : 공고대행(공고자는 시군이 아닌 사업자임), 평가위원 우선순위 선정 및 평가운영, 우선 순위자 협상 지도·감독 등
 - 사업자 : 평가단 인력풀 구성, 평가위원 선정, 우선 순위자 협상, 계약 등
 - 공고방법 : 시군 홈페이지[유관기관] 및 사업자 정문, 홈페이지 등에 최소 10일 이상
 - 평가단 구성(예) : 사업자 2, 시·군 1, 유관기관 1, 기계·설비 1, 건축·토목 1, 저온저장고 1, APC 운영경험자 1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4-1. 민간자본보조(402-01).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기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원칙1)** 복합시설(집하·선별·세척·전처리·포장·가공·예냉·저장 및 출하 등)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1순위자 우선 협상 방식의 경쟁입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으로 추진

· 단, 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 추진

- **(원칙2)**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①시·도 지역제한, ②제안서, ③농업분야 시설 경험, ④최근 3년 시공 경력 등)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분야는 신속한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역제한(시·도)을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지역제한 범위 완화는 가능-경쟁촉진 가능**)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공고-유관기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정부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수의계약 곤란)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또는 최저가 등) 및 제한경쟁으로 진행

*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 절감을 기하기 어려움, 사후 중점 점검 및 감사대상

- 단, 신기술 제품 등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소액이어서 수의계약 체결시 반드시 타당한 사유서 작성

- 정부 및 지자체 기준에 맞게 진행(계약 20백만원, 구매 2백만원 등)

○ 물품구입시에는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서 받아 그중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업체에서 구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 실시, **저온시설은 aT에서 추가로 설계적격 심사 실시**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 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등은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외국산 완제품은 성능시험만 받으면 되므로 자격증 요건 불필요**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를 위한 자문 의무화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함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에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감리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저장시설 중 기계설비는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또는** 냉동공조기계설비 전문업체(기술사 보유)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 시 전문기관(한국수확후관리협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농산물에 대한 특성 등 이해가 부족한 일반업체가 설계 및 시공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부실 시공 방지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 부당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

○ 보조금 반환시 잔존액은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

-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

* 총 사업비 10억원, 내용연수가 40년인 보조시설(건물), 5년 사용 후 반납, 지원조건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인 경우

☞ 국고 반납액 : 10억원 × (40년 - 5년) / 40년 × 30% = 262,500천원

※ 부당사용한 금액은 내용연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반환하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반환

- 보조금 교부일(통장 입금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반납일까지 연 5%의 이자 부과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최소 5년간 채권으로 관리

-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등의 주요재산(부동산, 예적금, 보험, 자동차, 기타 동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최소 1년에 1회 이상)하여 보조금 회수 가능여부 확인
- 5년 이후에도 보조금을 회수할 만한 재산 등이 없으면 손실처리 가능

APC 세부사업비 조정 범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비 조정 범위

□ 관련 규정(사업시행지침)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농수산 식품유통공사의 승인 필요

□ 질의내용(aT)

- 실시설계에서 예정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실시설계에서 예정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 <사례> 대부분 실시설계 예정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을 실시하면 예정사업비의 65~80% 이내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있음

□ 유권해석

-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 ~ 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 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

(단위 : 백만원)

당초사업비	예정사업비	비율	세부사업비 조정여부	비고
650 이상 ~ 1,350 이하	1,000	65 ~ 135%	생략	
552 이상 ~ 650 미만 1,350 초과 ~ 1,552.5 이하	1,000	55.2 ~ 65.0% 135 ~ 155.2%	조정	자체 조정 (15% 이내)
455 이상 ~ 552 미만 1,552.5 초과 ~ 1,755 이하	1,000	45.5 ~ 55.2% 155.2 ~ 175.5%	조정	시군 승인 (30% 이내)
325 이상 ~ 455 미만 1,755 초과 ~ 2,025 이하	1,000	32.5 ~ 45.5% 175.5 ~ 202.5%	조정	시도 승인 (50% 이내)
325 미만 2,025 초과	1,000	32.5% 미만 202.5% 초과	조정	aT 승인 (50% 초과)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 APC 확대시행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시행 안내

1. 관련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1.2), 한국전력공사 마케팅(요)82102-2311(2012.4.27).

2. 한미 FTA비준 보완대책 관련으로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었으니 해당시설 사용자가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 적용

○ 주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기타시설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나. 운영주체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다. 대상 시설 및 계약종별 변경 내역(판매·유통시설 제외)

구 분	현 행(주시설)	변 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 세척, 포장 등 : 산업용	농사용(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참조

라. 시행일 : 2012.4.26(목)

마. 요금적용 방법

○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되고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시 : 2012.4.1.부터 소급 적용. 단, 2012.6.1.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차액은 당월 이후 요금에서 감액)

○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별도 계약체결 후 소급개시일부터 적용

바. 적용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만 해당되오니 증명원을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한전에 제출 필요

○ 증명원 양식 : 붙임 참조

사. 고객안내 방법

○ 지자체(시군)에서 해당고객 안내

- 붙임 : 1. 한국전력공사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시설 확대 안내 공문 1부.
 2.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대비표 1부.
 3. 지원금 지급대상 시설 증명원 양식 1부. 끝.



한 국 전 력 공 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시설 확대 시행 알림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한미 FTA비준 보완대책 관련하여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었으니 해당시설 사용자가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 적용
 - 주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기타시설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 운영주체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 대상 시설 및 계약종별 변경 내역(판매·유통시설 제외)

구 분	현 행(주시설)	변 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 세척, 포장 등 :산업용	농사용(병)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분뇨저장, 발효, 포장 등 : 산업용	농사용(병)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산 업 용	농사용(병)
<u>굴껍질</u> 처리장	세척, 탈각, <u>굴껍질분쇄</u> : 산업용	농사용(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선별, 세척, 포장 등 :산업용	농사용(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참조

4. 시행일 : '12. 4. 26.

5. 요금적용 방법

○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되고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시 : '12. 4. 1.부터 소급적용
 단, '12. 6. 1.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차액은 당월 이후 요금에서 감액)

○ 주시설이 별도 계약체결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별도 계약체결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농촌진흥청장(원예특작과장), 산림청장(산림경영소득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채소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검사과장), 서울특별시시장(생활경제과장), 부산광역시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시장(농업유통과장), 울산광역시시장(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농식품유통과장), 강원도지사(유통원예과장), 충청북도지사(원예유통식품과장), 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친환경유통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유통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유통과장), 경상남도지사(농수산물유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산업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회원경제지원부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원예사업부장), 산림조합중앙회장(정책자금부장),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대표이사,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장(사무국장)

주무관 정순일 농업사무관 변상문 유통정책과장 서해동 (전결 2012. 4. 30.)

협조자

시행 유통정책과-1852 (2012. 4. 30.) 접수
 우 427-71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http://www.mifaff.go.kr
 전화번호 02-500-1944 팩스번호 02-507-3965 /clicki@mifaff.go.kr /부분공개(5)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및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만 해당되오니 증명원을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한전에 제출 필요

○ 증명원 양식 : 붙임 참조(실정에 맞게 수정 후 전국 지자체에 동일 양식으로 사용요)

7. 고객안내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 및 산하기관을 통해 해당고객 안내

붙임 : 1.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대비표 1부

2. 지원금 지급대상 시설 증명원 양식 1부. 끝.

한국전력공사사장

수신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유통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방역관리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수산정책과장)

팀원 최규철 팀장 홍성익 처장 신문철

협조자

시행 마케팅(요)82102-2311 (2012. 4. 27.) 접수 유통정책과-1820 (2012. 4. 27.)
우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 http://www.kepco.co.kr
전화번호 02-3456-4555 팩스번호 02-3456-4599 /pinaclo@kepco.co.kr /대국민 공개

전기공급약관 개정 대비표

현행	개정
<p>제 60 조(농사용전력)</p> <p>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p> <p>1. ~ 2. (생략)</p> <p>3. 농사용전력(병)</p> <p>가. (생략)</p> <p>나.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p> <p>다. (생략)</p> <p>(신 설)</p>	<p>제 60 조(농사용전력)</p> <p>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농사용전력(병)</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u>및 저온보관시설</u></p> <p>다. (현행과 같음)</p> <p><u>라.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u></p> <p><u>(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 (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u></p> <p><u>(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 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u></p> <p><u>(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u></p> <p><u>(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u></p>

현행	개정
	<p><u>부칙 (2012. 4. 26)</u></p> <p>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p> <p>② (요금적용)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나목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은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p>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대비표

현행	개정
<p>제 43 조(농사용전력)</p> <p>① ~ ② (생략)</p> <p>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 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 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 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 다. (생략)</p>	<p>제 43 조(농사용전력)</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 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 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u>임산물</u>” 이란 세세분류 “<u>02030</u>” 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곡” 이란 제1항 제1호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u>및 저온보관시설에는</u>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구분		생산자(自己)	수탁(他人의 물품)	구분		생산자(自己)	수탁(他人의 물품)
농산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농산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건조	농사용전력(병)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건조	농사용전력(병)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산물	저온보관	산업용전력	산업용전력	수산물	<u>저온보관</u>	<u>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u>	<u>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u>
	건조	농사용전력(병)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건조	농사용전력(병)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4. 위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4. 위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	
5.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병)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축산분뇨처리 업체는 제외한다.		5. <u>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병)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u>	
(신설)		6. <u>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u>	
(신설)		7. <u>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u>	
(신설)		8. <u>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에는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u>	

현행	개정
(신설)	<p>9.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페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p>
(신설)	<p>10.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의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p>
<p>6.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p>	<p>11. (현행 6호와 같음)</p>

현행	개정
	<p>부칙 (2012. 4.26)</p> <p>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p> <p>② (요금적용)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5호 내지 제10호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p>

국가(지자체) 지원대상 시설 증명원

1. 지원 대상 시설명(해당사항에 ☒ 표시)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지원금 성격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 지원금 지급 결정일 :

2. 시설 운영주체(전기사용자) :

3. 시설 주소(전기사용장소) :

위 전기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대상
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2012. .

확인기관 : (인)

담 당 자 : (인)

(연락처 :)

위 증명원 제출기관 : 한국전력공사 지사(지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61호, 2014.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원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급이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채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2161호, 2014.1.1>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7.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금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금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반환 명령에 따른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부칙 <제25478호, 2014.7.16.>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1.12.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6. 농어업기반 정비	8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수·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7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 개선	70	
나. 개별시설	30	
다.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액비화(液肥化) 시설)	5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3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녹비작물(綠肥作物)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말한 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10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70	
나. 큰 나무	50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6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70	
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무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자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 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입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같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제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제24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

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평가능력,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모, 현장실태조사, 사업성검토 등의 절차를 준수

2.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⑧ 지자체 등 사업집행기관장은 대상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의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사업집행기관장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 지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⑩ 사업집행기관장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및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은 예외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3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출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 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2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33조(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①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② 국비·지방비 배정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교육 및 건설등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조율은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홍보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⑧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적향 수준으로 반영한다.
- ⑨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5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전문자문관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문자문관계"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된 즉시 제4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및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등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53조의2(부가가치세 환급)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제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7.16. 신설>

제5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예산과장"이라 한다)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5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56조의 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

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56조의 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지원대상자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제5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 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

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된 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 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

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생산자단체등)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하고,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정의 승인을 얻어 지원의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사업자금과장·사업지원과장·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해당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용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公示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집행부진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자금 부정수령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제71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제73조(자체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제74조(자체평가의 절차) ①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④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 ⑤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특정평가) ①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②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9조(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80조(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81조(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①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부서의 자율평가) ①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②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총괄부서의 평가) ①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 가.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 나.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 라. 통폐합·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 ③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결과관의 통보 및 사업부서장의 의견제시) ①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보고) ①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 반영) ①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예산부서장은 재정부분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5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2조(정부사업대행 및 집행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공공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훈령을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44호, 2012.12.18),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8호, 2013.07.18)호,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70호 2013.10.7)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 한도

$$= \text{시설물의 감정평가액} \times \{(\text{자부담액} + \text{융자액})/\text{총사업비}\}$$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를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73호, 2014.1.1, 타법개정]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 : 2013.1.1] 제105조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제2조(영세를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2013.3.23., 2014.2.21.>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을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입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2013.2.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입업 중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입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입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입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2014.2.21.>](#)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제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제목개정 2010.2.18.]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3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제목개정 2010.2.18.]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2.18.]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2.2.2.>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6.28.>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정)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 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목개정 2010.2.18.]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2.18.]

제12조(환급중단 추정세액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목개정 2002.12.30.]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잡어업(裸漚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 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남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남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운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목개정 2010.2.18.]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제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② 농민과 어민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3.3.23.>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본조신설 2008.2.22.]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

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어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제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2.22.]

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12.30., 2013.2.15.>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팩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2013.2.15.>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8.2.22.>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⑥농·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중 제5항제4호의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목개정 2008.2.22.]

제18조 삭제 <2008.2.22.>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3.2.15., 2013.3.23.>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제목개정 2008.2.22.]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3.23.>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⑩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2008.2.29.>

[제목개정 2008.2.2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본조신설 2008.2.22.]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정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

에게 그 추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28.]

[제목개정 2008.2.22.]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 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본조신설 2013.2.15.]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정수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4조(구분관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7.12.31.>

[제목개정 2005.2.19.]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 내에서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3.23., 2014.2.21.>

[전문개정 2008.2.22.]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

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2.2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집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별표 2] <개정 2008.2.2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 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 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크리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12.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집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별표 3의2] <신설 2005.2.19>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별표 5] <개정 2014.2.2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농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만 해당한다)
13. 농업용 양수기
14. 범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한다)
45. 화훼재배용 배지
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 1. 1.시행)

12. 민간이전(307)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측사, 건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 ~ 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 ~ 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2) 중 택배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1.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2041)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및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0809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5	10년 (8년~12년)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p>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p> <p>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 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 년)를 적용한다.</p> <p>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한다)</p> <p>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p> <p>28. 전기장비 제조업</p> <p>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p> <p>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p> <p>32. 가구 제조업</p> <p>33. 기타 제품 제조업</p>
6	12년 (9년~15년)	제조업	<p>12. 담배제조업</p> <p>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운수업	<p>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 (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 한다.</p> <p>51. 항공 운송업</p>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p>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 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 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 타 유·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 를 적용한다.</p>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 기 및 수도사 업	<p>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p>
9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증 기 및 수도사 업	<p>36. 수도사업</p>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15년 개정 초안이오니 참고 바람]

목 차

제 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1
제 2장 시설물 관리	2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2
제5조(사후관리기간)	2
제6조(산지유통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3
제7조(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3
제 3장 운영지도 및 점검	4
제8조(운영활성화 지원)	4
제9조(현장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4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5
제11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5
제12조(농산물간이집하장의 활용)	6
제 4장 부칙 및 경과규정	7
제1조(시행일)	7
제2조(경과규정)	7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산지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의 지원으로 산지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등의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 ② “사업자”라 함은 시·군(자치구 포함),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 ③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산지유통시설정보 및 농산물의 가격·유통정보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에그릭스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법령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1]**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기간)

①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은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 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 (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시·군의 사후관리 해제 승인을 받은 시설은 처분이 가능하나 가급적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산지유통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① 사업자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원료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한 담보제공은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산지유통시설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산지유통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원료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비 배정 및 기 담보제공 등을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반복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승인은 불필요하나,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 및 담보제공 대상 재산의 가치 증가가 없어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① 사업자가 시설물의 ~~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시·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관할 시·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내외적 입지 및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설물의 이전 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 시장·군수

2. 농업관련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 : 시·도지사

③ 승인권자를 달리한 승인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당해 승인권이 있는 해당기관장에게 이첩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관련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본 지침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산지유통시설의 용도를 미곡종합처리장 원료창고, 농자재보관창고, 농산물건조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직판장,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2항의 농업관련목적 용도변경으로 본다.

제 3 장 운영지도 및 점검

제8조(운영활성화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기관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실태조사와 별개로 매년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여 근거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운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미활용시설 등 운영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 사용하도록 알선하거나,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보완자금(확장 포함) 또는 운영자금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실적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한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는 협동조합, 작목반, 영농회 등 농협계통조직은 농협중앙회, 기타조직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후 시행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가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일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제9조에 의한 현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경우
2. 사업대상자 선정(개·보수사업 포함)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지유통시설을 완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당해 업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를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1조의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제15조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대내외적인 여건변

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병·통합 등의 구조조정 촉진,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양수도 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농산물간이집하장의 활용)

①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②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의 비수기 활용승인 신청이 있으면 사용목적의 공공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승인하지

- 못한다.
1.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외부 상인 등의 일반상품 보관
 2. 당구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
 3. 횃집 등 음식료 판매시설

제 4 장 부칙 및 경과규정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농산물간이집하장관리준칙에 의해 처리된 산지유통시설은 본 관리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지원사업명	설치년도	총 사업비(천원)				지원시설 내역 (㎡)	지원장비 및 기계 (조, 대, 톤)	시설변동현 황 기입	작성 자 성 명 및 작성일자
				계	국비 (보조, 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				
								예) 예냉시설 30㎡ 저온저장고 330㎡ 집하선별장200㎡ 사무실 50㎡	예)선별기 2조 비파괴당도측정기1대 간마늘기계1조 냉동탑차 3.5톤 수송차량 5톤 제함기 1 운반상자 1만개		

- ① 정부지원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② 시설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변동사유 및 일시를 기입하여 시설변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별표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표(전년도 연말기준)

□ 조사기관 : _____ 시도 _____ 사군구 _____ 읍면동 _____
□ 조 사 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소유 주체 (운영 주체)	소재지 (주소)	시 설 내 역(㎡)					주요장비 및 기계				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 사업명	지원 (설치) 연도	주요 취급품목 (2~3개)	연간활용일수		연간처리물량(톤)		연락처 (성명) (전화)
		합계	예냉 시설	저 온 저장고	집하· 선별 포장 장	일반 고 등 가 시설	선별기 (조)	비과 과당 도축 정기 (대)	간 마늘 기계 (조)	냉동 탑차 (톤)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저 온 저장고	집하· 선별 포장 장	저 온 저장고	집하· 선별 포장 장	

<별표3>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 조사(전년도 연말기준)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단체명)	지원연도	대표자	부지 (㎡)	건물 (㎡)	사업비 (백만원)	주요시설 장 비	주취급 품목	집하량 (톤)	선별량 (톤)	공동출하량 (톤)	활용일수 (일)	주거래처

- ① 농산물간이집하장 운영실태 책자 참고하여 조사
- ② 농산물간이집하장의 비수기 활용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도, 시·군은 간이집하장 활용도 제고 등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③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임(부지구입비는 제외)
- ※ 부지, 건물면적은 ㎡로 기입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자 처리방안(예시)

○○법인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계획(안)

1. 추진경과

- ('11.4~10월) ○○지방경찰청은 ○○법인에 대해 보조금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
 - * 매일경제는 본 사안을 정부의 보조금 관리부실 제목으로 4회 보도('11.5월)
 - * 수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농관원, 유통공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실시
- ('11.10.24) 경찰청에서 관계기관에 ○○법인의 입건 및 범죄사실 통보
 - 죄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40조)
 -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사실 : ○개 사업(○○건)에서 000백만원 편취
 -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이용해서 보조금 편취
 - * 관련 사업 : APC 건립 지원, 시군유통회사, 원예브랜드, 저온유통체계구축, GAP, 수출선도조직육성, 표준규격공동출하, 지자체 자체사업
- ('11.11월) 경찰청 통보내용을 근거로 보조사업 시행기관(○○시, aT)에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실시
- ('11.11.25) 검찰청에서 ○○법인은 기소유예, 대표자는 기소 통보
 - ○○법인의 피의사실은 인정, 법인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대표자 등이 기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

2. 처리방안

☐ 일정기간 농림수산사업 자금지원 제한

- 경찰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부당사용 금액은 약 ○○○백만원이며 향후 5년간 지원제한에 해당(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 단, 현재 각 사안별로 부당사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은 제한하되 제한기간은 재판 종료 후 확정

* 기산일은 ○○법건에 대한 검찰처분 통지서 발송일('11.11.25)

☐ 시설물 성격의 ○○○사업 및 ○○○○사업의 잔여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되, 별도 사후관리 대책 마련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제5항 :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사업 자금 지원 유예

- '11년도 사업은 연초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실시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당사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 종료시까지 지원 유예

- 최종 재판결과 및 부당사용 정도에 따라 재지원 여부 결정

* 관련 예산(400백만원)은 해당 지자체(○○도)에 교부하되 재판 종료시까지 사업자에 대한 지급 유보

☐ 유죄 확정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일부) 및 반환

-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사용으로 확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실시

* 재판 종료 후 원활한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가압류 기 실시

3. 향후 조치계획

☐ 농림수산사업 자금 지원제한 통보 : 즉시

- 보조사업 시행기관(농관원, ○○시, aT)은 ○○법인에게 자금 지원제한 통보
-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통지 후 유통정책과로 결과 보고
- 유통정책과는 보조사업 시행기관의 행정처분 통지 후에 지자체 및 관련기관(aT,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에게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제한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및 지원 제한기간 확정 등은 재판 종료 후 시행

<참고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서식)		
1. 처분의 제목		○○○사업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농림수산물사업 자금 지원제한
2. 당사자	성명	업체명 : ○○법인(법인등록번호) 대 표 : ○ ○ ○
	주소	○○○도 ○○시 ○○면 ○○리 ○○○(T:)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등 ○건에 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총 ○○백만원을 부당사용
4. 처분의 내용		○ 향후 일정기간 농림수산물사업자금 지원 금지 * 지원 제한기간은 재판 종료 후 확정
5. 법적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의 사용금지),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제33조(강제징수) ○ 농림수산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지원의 제한)
6. 의견제출 및 미 제출시 처리방법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와 농림수산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지원의 제한) 등에 의거 행정 처분(지원금 반환 및 지원제한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명칭 : 주소 :
8. 의견제출기한		7일 이내
9. 기타		
<p>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처분기관명</p>		

<참고 2>

행정처분통지서 (서식)		
1. 처분의 제목		○○○사업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농림수산물사업 자금 지원제한 등
2. 당사자	성명	업체명 : ○○법인(법인등록번호) 대 표 : ○ ○ ○
	주소	○○○도 ○○시 ○○면 ○○리 ○○○(T:)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등 ○건에 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총 ○○백만원을 부당사용
4. 처분의 내용		○ 향후 일정기간 농림수산물사업자금 지원 금지 * 지원 제한기간은 재판 종료 후 확정
5. 법적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의 사용금지),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제33조(강제징수) ○ 농림수산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지원의 제한)
6. 이의신청 등 안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이의신청)에 의거 이의신청 (20일 이내)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불복하실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심판(90일 이내) 및 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이의신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명칭 : 주소 :
8. 이의신청기한		20일 이내
9. 기타		
<p>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와 농림수산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지원의 제한) 등에 의거 행정처분(지원금의 반환 및 지원제한 등) 됨을 알려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처분기관명</p>		

보도자료 청렴·세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2012.3.7(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 포	2012. 3. 7.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장영준 ☎ 02-360-6815
	총 쪽	2쪽

농어업시설 보조금지원시 현지 합동조사 의무화 추진 권익위,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 **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 사업성 검토 시 현지 합동조사(자자체 등) 실시 및 검토기간 적정화
 - 신청자의 지원이력 검토 및 지원내역 통합 관리
-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정기적인 등기부 열람 등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천만원 미만 저가시설물 관리책임 강화(관리 소홀자의 불이익 부여 등)

-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업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

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가가 해마다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과 사후관리,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권익위는 우선, 5천만원(단, 수산사업은 7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수산물식품부에 권고했다. 검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해 검토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 지자체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해 사업수행력이 떨어지는 자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일부 농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이력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사업자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선정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게 해 담보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금지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일부 보조사업자는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도를 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이외에 지자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는 향후 선정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3. 7. 24.(수) 전화번호 : 02-3480-2200 주책임자 : 이동열(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 팀장)
제 목	『국가·지자체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 나랏돈 빼먹는 범죄 끝까지 추적·엄단 -

○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나랏돈을 빼돌린 『정부 보조금 비리』에 대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12. 1. ~ ’13. 6.까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전개하여 총 70여개 업체(단체)가 약 63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 적발하여 총 93명 구속(312명 입건)

《대표적 비리 유형》

-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횡령」
 - ‘08. 9.~’10. 8. 서울 강남구 소재 여행전문업체 A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된 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 원 등 20억 원을 카지노업체 주식매입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 ※ 돌봄여행사업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전문 돌봄인력이 국고지원 여행대상자인 장애인·노인과 동행하여 수행하는 여행 서비스 사업
-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편취」
 - ‘11. 8.~’12. 1.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장비업체 B사는 수도권 공장이 없음에도 전남도청 소속 투자유치자문관 등과 짜고 허위의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공장을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고 1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7억 7,000만 원 편취
-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편취」
 - ‘09. 4.~’10. 2. 김제시 소재 수박가공업체인 C농원은 농림부 주관 향토사업 육성사업 일환인 ‘김제시 수박가공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부풀린 공사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김제시로부터 10억 원 편취
 - ※ 동종수법의 지자체 지역특화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 사례 전국적으로 수십건 적발
- 「대학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
 - ‘11. 2.~’12. 대구 달서구 소재 D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대학 선정지표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 및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지표를 조작하여 국고보조금 약 23억 원 편취

《보조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개념」
 -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업 정책적 견지에서 특정산업의 육성, 기술의 개발 및 향상 등의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
- 「보조금 현황」
 - 정부가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2년 46조 4,9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약 14%를 차지
- 「보조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수사 결과, 보조금은 그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각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된 금원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
 - ※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부터 놓여준 주민까지 각종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카지노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부당수령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이 일종의 ‘눈먼 돈’ 취급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 발생
 - 특히, 대부분의 보조금 예산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단체장들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선심행정 또는 토착세력과 유착으로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 증가
 - 또한, 보조금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업자·브로커들과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 예산,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 확인
- 「제도 개선방안」
 - 사회적 필요성 및 경제동향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보조금 지급대상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부 유관기관 합동 점검』 필요
 - 보조금 비리가 중한 범죄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검찰의 향후 대책》

- 「유관기관 합동 감시 체제 구축을 통한 보조금 비리 엄단」
 - 검찰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감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 보조금 비리사범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함으로써 동종비리가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할 예정임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별첨》

주요 유형별 비리수사 사례

1. 산업기술평가원 등 정부지원금

▶ 정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사업자에게 개발비를 지원 후 사업 성공시 출연금의 20~40%를 회수하고, 사업 실패시 귀책사유에 따라 출연금 환수여부 결정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과적검사시스템 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5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그 중 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1명 구속 (‘12. 7. 서울남부지검)
- 산업자원부와 선박엔진용 초내열 부품소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 시제품을 제출하는 등으로 연구비 약 27억 원을 편취한 중소기업 대표 1명 구속 (‘12. 11. 인천지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3억 원을 지원받아 5억 7,000만 원을 여행경비 등으로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등 5명 구속 (‘12. 11. 평택지청)
- 지식경제부로부터 ‘조정밀절삭 가공시스템 개발’ 사업비로 출연금 14억 원을 지원받아 8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1명 불구속 기소 (‘13. 3. 인천지검)

2.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 이동권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회적 선도 사업에 대해서까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확인

- '장애인·노인 가정 돌봄여행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로 작성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채용실적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보조금 20억 원을 횡령한 사회적 선도업체 대표 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12. 5. 서울중앙지검)
- '취약계층 가사, 간병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 실적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보조금 1억 1,972만 원 부정수급한 위탁업체 대표 1명 구속 ('13. 1. 울산지검)
-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취업자를 알선취업자로 허위실적 보고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1,9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구속 ('13. 1. 울산지검)

3. 시민·사회·종교 단체 보조금

▶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단체 수장, 시민단체 임원들도 각종 보조금 등 나랏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

-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이군경회에 지급된 보조금 5,732만 원 상당을 해외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장 및 총무부장 불구속 ('13. 5. 대구지검)
- 충북도청 충북체육회로부터 카누 경기정 구입, 선수 영입금 명목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1억 2,858만 원을 횡령한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및 전무이사 각 구속 ('13. 5. 청주지검)
- 연극행사 등과 관련하여 속초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극단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구속 및 속초지부장 불구속 ('13. 5. 속초지청)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 4,600만 원을 횡령한 성균관장 및 성균관 교화부장, 총무부장 등 3명 구속 ('13. 4. 안동지청)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의 일환인 인성캠프 강사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700만 원 상당 횡령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 및 기획실장 불구속 기소 ('13. 1. 안동지청)
- 허위 사업계획서, 위조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부산시청으로부터 2,618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장 1명 구속 ('12. 7. 부산동부지청)
- 도민체전 출전수당 허위지급서류, 허위 피복비 구입서류 등을 제출하여 태백시 보조금 2억 4,488만 원을 횡령한 태백시 체육회 사무국장 1명 구속 ('12. 7. 춘천지검)
-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서류 등을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6억 3,753만 원을 횡령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리직원 1명 구속 ('12. 12. 서울서부지검)

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정신지체자, 정신질환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금 유용 및 불법 수령 사례 다수 적발

- 교복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매하였다는 허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보조금 3억 4,500만원을 편취한 대표 1명 구속 ('12. 11. 원주지청)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후원금 5억 5,800만 원을 빼돌린 원장 스님 등 2명 불구속 기소 ('12. 12. 의정부지청)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가장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아기본보조금 등 5,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12. 7. 경주지청)
-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운송차량 운영 보조금 등 2억 원을 횡령한 장애인복지연합회 이사장 등 3명 구속 ('12. 1. 여주지청)

5.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기업 이전유치 활동에 편승하여 브로커, 공무원 등이 결탁한 신종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 적발

- 수도권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중소기업 대표, 전라남도 투자유치 자문관 등 3명 구속 ('12. 11. 서울중앙지검)

6.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화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시 전문성 부족으로 허위 청구 및 보조금 횡령 사례 급증

▶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영농조합 등의 간부 및 전직 공무원이 개입한 보조금 편취 사례 다수 확인

- '수박가공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부풀린 공사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약 10억 원을 편취한 영농법인 대표 1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13. 5. 전주지검)
- '친환경 영농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영농법인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납품업자가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약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영농법인 대표 등 18명 인지, 5명 구속 ('13. 6. 목포지청)
- '친환경 농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것처럼 영농일지 등을 조작하여 해남군 등으로부터 보조금 10억 원 상당 편취한 10명 불구속 기소 ('13. 3. 해남지청)
-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3명 구속, 7명 불구속 기소 ('13. 2. 제주지검)

- '온풍기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공모하여 조작된 자부담금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온풍기제조 업체 대표 2명 구속 기소('13. 1. 김천지청)
- '완전배합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축산업자 등 2명 구속 ('13. 3. 천안지청)
- '유기농벨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마을이장 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13. 2. 거창지청)
- '명암산약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0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5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12. 11. 제천지청)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2명 구속 ('12. 11. 목포지청)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일러설치업체 대표 2명 구속 ('12. 8. 광주지검)
-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자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농업진흥공사의 농지매입지원금 1억 원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13. 5. 장흥지청)

-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농자재 대표 구속 ('13. 4. 평택지청)

▶ 기타 보조금 편취 사례

- '비닐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12. 8. 밀양지청), '파프리카 시설 지원사업'('12. 7. 광주지검), '쌀막걸리 생산라인 설치사업'('13. 2. 인천지검), '가축사료 생산체 육성사업'('13. 4. 공주지청), '친환경 벼농사 육성사업'('13. 3. 해남지청), '유기농 자연란 생산농가 지원 사업'('12. 2. 제천지청),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지원사업'('12. 1. 대구지검) 등

- ▶ 대부분 자부담금 서류,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 편취

7. 대학교 관련 국고 보조금

- ▶ '반값 등록금',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자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면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 다수 확인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의 지표를 조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23억 원 상당 편취한 ○○대학교 총장 및 교수 등 6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13. 1. 대구서부지청)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기준 지표들을 부풀려 5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 총장 구속, 교수 등 직원 6명 불구속 ('13. 1. 포항지청)
-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과다계상 금액을 돌려받는 등으로 대학교 교비 및 보조금 합계 32억 원을 횡령한 ○○대학 총장 등 2명 구속 ('12. 7. 대구지검)
- 허위 공사대금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7억 원 등을 횡령한 ○○대학 총장 등 4명 구속 ('12. 4. 목포지청)

8. 신용보증기금

- 설비 도급계약 금액을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18억 원 상당의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 대출 담보로 사용한 중소기업 대표 1명 구속 ('12. 3. 부산지검)

9. 관련 공무원의 묵인·비호

▶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의무는 다하지 아니한 채 신청업자,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부패 확인

- 가축사료(TMR) 생산체 육성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2,400만 원 수수한 공주시 6급 공무원 구속 ('13. 4. 공주시청)

- 조사료생산 영농법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 선정 대가로 2,000만원 수수 공무원, 보조금 사업선정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 3,500만 원 수수 브로커,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 2억 3,000만 원 상당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등 5명 구속, 14명 불구속 ('13. 3. 천안지청)
- 거창군의 유기농벨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군 보조금 2억 3,000만 원 상당 편취한 마을이장 등 4명 인지, 1명 구속 ('13. 2. 거창지청)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영농조합 대표에게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보조금 4억 3,200만원을 지급한 무안군청 공무원 2명 구속 ('12. 12. 목포지청)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수수한 동해시장 구속 ('12. 4. 강릉지청)
- 김 생산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령시장 자치행정국장 1명 구속 ('12. 6. 홍성지청)

10. 생계비·실업급여 보조금

▶ 기초 생계비, 실업급여 등을 편법·부당하게 수령하는 구조적 부패 확인

-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허위로 근로자들을 입사시킨 후 실업급여 및 체당금 1억 2,000만 원 편취한 22명 인지, 3명 구속 ('13. 3. 충주지청)
- 실업경위 및 실업상태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35건 적발하여 입건 처리(예, 취업사실 미신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이직사유 기망) ('12. 6. 포항지청)

11. 중소·벤처 육성 지원금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벤처 육성 지원금을 착복하는 구조적 부패 확인

-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교통효율화 사업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5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연구개발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교통설비 관련 제조업체 대표 구속 ('12. 7. 남부지검)

12. 기 타

- 월간지를 제작하여 영호남 관공서 등에 무료로 배포하겠다고며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9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월간지 발행업체 대표 구속 ('13. 6. 부산지검)
- 인터넷 위탁 교육업체를 설립한 후 사업주들이 교육비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5억 6,100만 원 편취한 인터넷 교육업체 운영자 등 2명 구속, 6명 불구속 ('13. 6. 광주지검)

감사합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이강권 (전화) 044-201-2224

(이메일) mirae22@korea.kr

문의사항은 가급적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